

의안번호	제219호
보 고 년 월 일	2012. 7. 6 (제 11 회)

보 고 사 항

- 정보자원 운영 안정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-
법정부 정보자원 통합운영 확대 추진계획

제 출 자	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간사 맹형규 (행정안전부 장관)
제출년월일	2012. 6. 21.

1. 보고주문

- 「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운영 확대 추진계획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

2. 보고이유

- 기관별 자체운영 정보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 통합운영 확대를 추진하여 국가 정보자원의 안정적 보안체계 구현과 예산 절감 등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① 추진 배경

- 소속·산하기관 등이 자체운영중인 정보자원에 대한 추가 통합 요구
 - 정부 정보자원의 보안수준 강화, 안정성 확보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정보자원 통합운영의 필요성 증대
 - ※ 감사원은 각 행정기관 등에서 개별운영 중인 정보자원을 통합전산센터로 이전·운영할 것을 요구('10.9)
 - 정부기관의 세종시·혁신도시 이전시기에 맞춰 기관별 자체 운영중인 정보자원의 통합운영 추진 필요

② 정보자원 통합운영 추진 경과

-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현재 국무총리실, 행정안전부, 국세청 등 50개 중앙행정기관 서버 7,061대를 통합 운영 중
 - 통합운영으로 서비스 안정성 제고 및 종합적 사이버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전자정부 보안 대응체계 강화
 - ※ 24시간 보안관제로 연평균 198,229건의 사이버 침해시도를 탐지·대응하여,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DDoS공격 예방 등으로 총 5,571억원의 효익 추산
 -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유지보수 운영예산 절감 등 정보자원 운영효율성 제고
 - ※ 설립 초기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, 통합전산센터 본격 운영 6년만인 '12년 상반기 중 손익분기점 돌파 전망
- 재해·재난·테러 등의 국가 비상사태시 정부업무의 연속성 보장 및 국가 정보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「정부전산백업센터」 구축 추진中(~'15년)
 - ※ 방호능력을 고려하여 지하터널 형태로 구축, 기존 통합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 이전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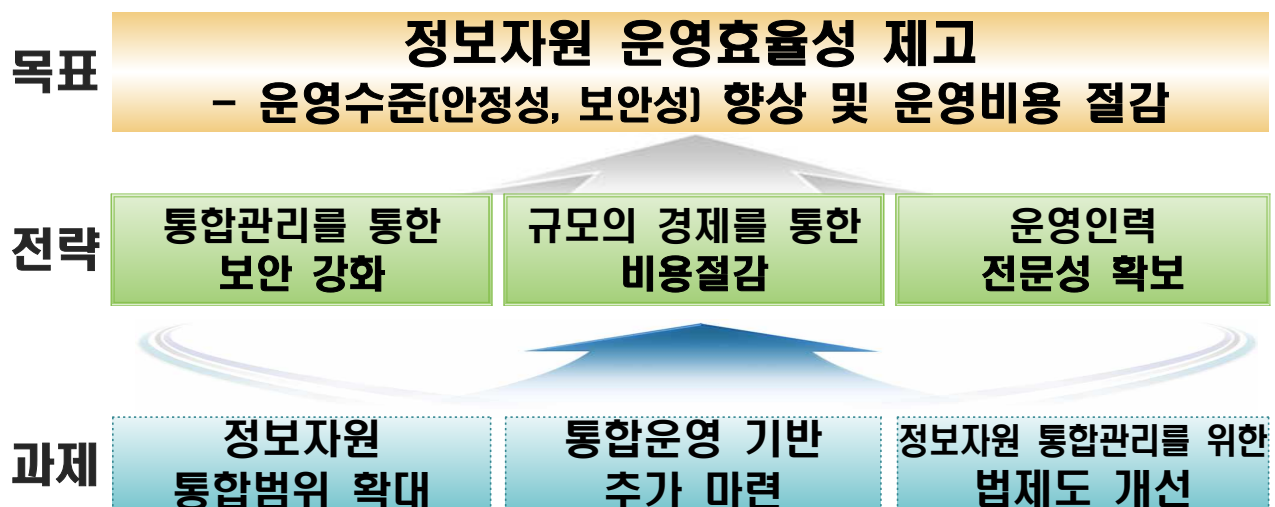
③ 현황 및 문제점

- 그간의 정보자원 통합정책 추진 및 제1·2통합전산센터 구축 후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서버 중 63.2%(11,909대)가 자체운영중
 - 자체운영은 운영비 증가, 서비스 안정성 저하, 보안 및 재해·재난에 취약
 - 특히, 정부자산*으로 분류되는 정보자원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, 보안 강화, 안정성 확보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운영 필요
 - * 중앙행정기관(본부·소속기관)운영 자원 및 준정부기관에서 수탁운영중인 자원
 - 국무총리실,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00여개 소속·준정부기관이 세종시·혁신도시로 이전('12~'16년)
 - 통합대상 자원을 기관별 지방이전 시점에 맞춰 통합 추진시 정보자원 이전비용 및 개별기관 전산실 구축비 절감 효과
 -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실 여유면적 27%로 대규모 추가 수용 어려움
 - 정보자원 통합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운영기반 추가마련 필요
 - 정부자산임에도 준정부기관이 수탁운영하는 정보자원은 법제도상 통합운영 대상에서 제외
- ※ 통합센터는 현재 소속기관(1,317대), 준정부기관(20대) 정보자원을 통합운영중

➡ 지방이전기관 이전시점에 맞춘 정부자산 정보자원 추가 통합운영 및 통합운영기반 추가 마련, 제도 개선 필요

④ 추진계획

가. 목표 및 전략



나. 추진과제

① 정보자원 통합운영 범위 확대

- (대상) 정부자산으로 분류되는 정보자원을 추가 통합운영
(총 8,000여대 추산)
 -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자체운영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추진
 - 준정부기관이 위탁운영중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도 통합전산센터로 이전
 - ※ 통신망관리 등 개별기관 운영이 필수적인 자원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하고, 준정부기관 내부업무용 정보자원은 기관 희망시 통합 검토
- (방식) 기관별 이전시기에 따라 정보자원 추가 통합운영 추진
 - ※ 통합운영 대상 정보자원은 대상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
(중앙행정기관 정보화담당관 협의회(5.3) 및 소속·준정부기관 설명회(5.25) 기 개최)
 - ※ 소속·준정부기관 의견조사('125월)결과, 다수 기관이 자체운영자원의 통합센터 입주 희망
 - '12~'15년 세종시·혁신도시 이전기관 정보자원은 대전·광주 통합전산센터 이전
 - ※ 세종시 이전기관은 대전·광주센터 분산이전,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광주센터 이전
(광주센터 소규모 증축 추진)
 - 미이전기관 및 '16년 이후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보자원은 통합운영 기반 추가마련 후 이전

② 통합운영 기반 추가 마련

- (필요성) 기존 통합전산센터의 여유면적이 부족하여 통합대상 정보자원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움
- (추진방향) 정부자산 정보자원의 통합운영을 위한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검토
 - 관련기관 합의 도출,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 추진

③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

- (필요성) 현재 일부 소속(1,317대) 및 준정부기관(20대) 정보자원이 통합센터 통합 관리·운영중이나,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
- (추진방향) 준정부기관에 위탁운영중인 중앙행정기관 정보자원 및 소속기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「전자정부법」 개정('12년)
 - ※ 제54조제2항의 정보자원 통합관리 대상을 “중앙행정기관”에서 “행정기관등”(소속·산하기관 등 포함)으로 확대·변경

⑤ 기대효과

- 총 8,000여대 정보자원을 추가 통합운영
 - 고성능 보안인프라 운용 및 24시간 관제로 DDoS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 향상
 -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체계 적용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재해대비 체계 및 안정적 운영환경 구축 가능
 -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으로 정보자원 운영효율화

【 별 지 】

－ 정보자원 운영 안정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－
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운영 확대
추진계획(안)

2012. 6



행정안전부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정보자원 통합운영 추진경과	2
III. 현황 및 문제점	5
IV. 추진계획	8
1. 추진목표 및 전략	8
2. 추진과제	9
V. 기대 효과	11
붙임 자료	12

□ 소속·산하기관 정보자원에 대한 추가 통합 요구

- ※ 감사원은 각 행정기관 등에서 개별운영 중인 정보자원 중 추가로 통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을 통합전산센터로 이전·운영할 것을 요구('10.9)
- 소속·산하기관별 정보자원 운영수준 격차가 심하고 운영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소규모 기관은 정보자원 운영 어려움
- 정부부처 및 소속·산하기관의 세종시 등 지방이전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정보자원의 통합운영 추진 필요

□ 사이버공격 수준 향상에 따른 보안위협 증가

- 최근 분산서비스거부(DDoS)공격 등 해킹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, 사이버공격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응체계는 미흡
 - 소규모 개별운영기관은 대응 관리체계가 열악하여 보안위협에 노출
-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관제 및 대응체계는 개별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
 - ※ 보안장비 설치율 증가 : 65%('04년) ⇒ 100%('08년), 보안관제 : 필요시('04년) ⇒ 항시('08년)

□ 신기술 도입으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환경 요구

- 정보기술 발전이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도입 등 통합관리를 통한 자원 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
 - 저비용 고효율의 신기술 도입을 통해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소요전력 절감 추구

미연방정부의 데이터센터 통합 추진사례

- 공공부문 각 기관의 개별적인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정보자원 비효율적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발생
 - ※ 공공기관 데이터센터 수 : ('98년) 432개 → ('11년) 1,100개
- ➡ 정보자원 활용률 제고 및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데이터센터 통합방안 수립 (FDCCI, Federal Data Center Consolidation Initiative)
 - ※ '15년까지 기존 800여개(전체의 40%)의 데이터센터를 통·폐 합

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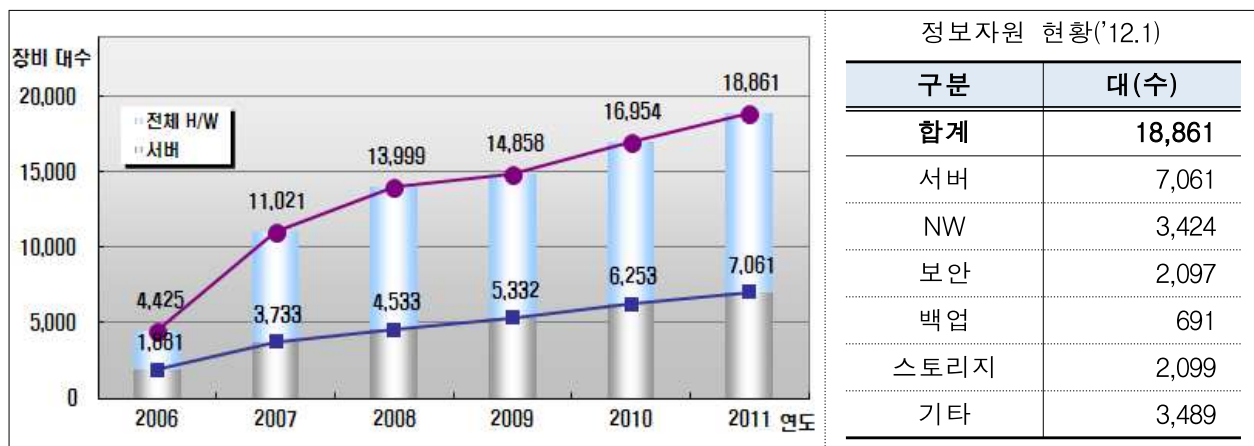
정보자원 통합운영 추진경과

제1 · 2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· 운영

○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국무총리실, 행정안전부, 국세청 등 50개기관 1,033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

- 서버 7,061대 등 총 18,861대의 전산장비를 운영 중('11년말 자산기준)

< 통합센터 장비 증가추이 >



< 부처 입주 현황 >

구 분	대전센터	광주센터
조감도		
사업기간 (예산)	▪ '04. 12 ~ '06. 10(1,389억 원)	▪ '05. 04 ~ '07. 12(1,890억 원)
구축형태	▪ 기존 건물 임차	▪ 건물 신축
규모	▪ 대지 61,880m ² , 건물 연면적 31,758m ² , 지하1층 지상 5층	▪ 대지 42,007m ² , 건물 연면적 33,562m ² , 지하 2층 지상 5층
시스템 이전	▪ '05. 10. ~ '06. 10	▪ '07. 06 ~ '07. 12
정보자원	▪ 서버 등 10,401대 장비 운영	▪ 서버 등 8,460대 장비 운영
고객기관	▪ 28개 기관 (9개 소위원회)	▪ 22개 기관
센터구성 특징	양 센터는 재해·재난에 대비하여 상호 업무 백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	

○ 중앙부처 정보자원의 통합운영으로 서비스 안정성 증대, 지속적 장애관제 확충을 통해 장애관제 강화

- 통합관리 강화 : ('06) 4,200대 → ('11) 18,861대, 4.5배 증가
- 정보자원 가동률 향상 : ('06) 99.9908% → ('11) 99.9998%로 증가
- 장애시간 단축 : ('04, 통합전) 67분 → ('06) 63.9초 → ('11) 4.77초

<장애관제시스템 보유 및 장애관제율>

구분		'06	'07	'08	'09	'10
장애관제 시스템 보유대수	ESM(보안관제)	564본	1,694본	3,718본	4,694본	5,484본
	SMS(서버관리)	1,474본	2,096본	2,304본	4,408본	5,050본
	NMS(네트워크관리)	230대	360대	910대	1,038대	1,073대
장애관제율		-	60%	81%	88%	94%

○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보안 대응체계 강화

- 정보보호절차 확립,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사이버위협에 종합적 방어체계 기반 마련

<침해사고 탐지 및 사이버침해 차단율>

구분	'06	'07	'08	'09	'10
침해사고 탐지 건 수	38,568건	197,810건	294,579건	218,646건	227,963건
사이버침해 차단율	-	-	100%	100%	100%

- 통합센터 설립·운영 후 보안 및 재해복구체계 강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총 5,715억원에 달함

※ 보안강화 효과(5,571억원) 및 재해복구 강화 효과(174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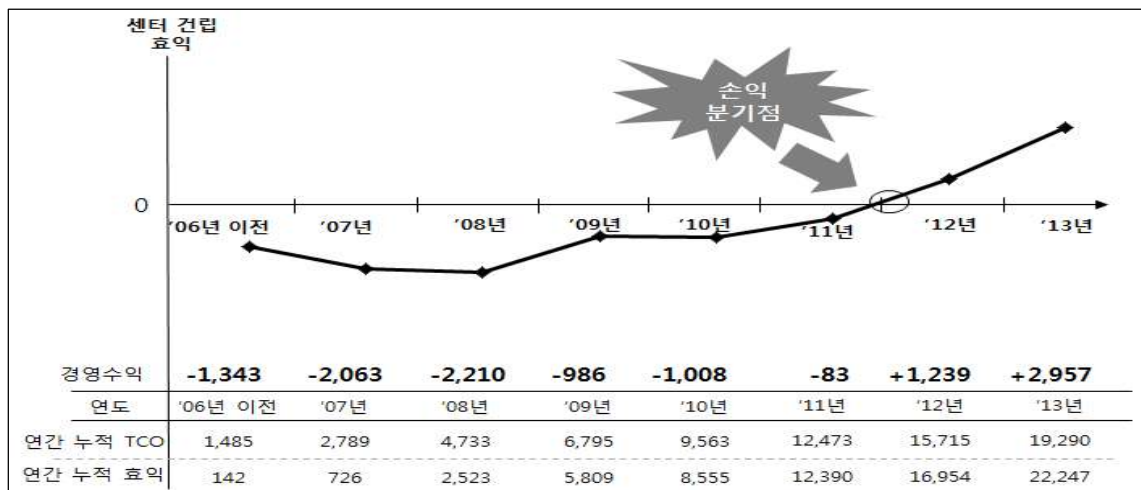
○ 통합운영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예산 절감 등
정보자원 운영효율성 강화

- 각 부처로부터 정보시스템 이전·통합 등 설립 초기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, '12년 상반기 중 손익분기점 돌파 전망
- 중앙행정기관 정보자원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으로 예산 절감(4,475억)
- H/W 정보자원 통합사업 수행으로 자원 공동활용 강화(1,247억)

통합센터운영 경제적 효과

◆ 총 투자비용 : 약 12,473억원('11년)

◆ 투자 효과 : 약 12,390억원('11년)



※ 국가정보화 투자관리체계 개선 영역 결과 참조('11.10, 행정안전부/한국정보화진흥원)

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추진

○ 정보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「정부전산백업센터」 구축 추진中

※ 장거리포, EMP 방호 등을 고려하여 지하터널 형태로 구축

- (규모) 국정핵심업무 관련 1,200여대 서버('25년 예측수량) 수용
(기존 통합전산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 이전·운영)
- (일정) '13년 착공, '15년 완공 ('16년 본격운영)
- (효과) 핵심적인 국가 정보자원의 안전한 보호를 통해 재난·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시 정부업무의 안정성·연속성 보장

Ⅲ 현황 및 문제점

□ 개별기관의 정보자원 자체운영¹⁾

< 기관별 자체운영 정보자원 >

○ 중앙행정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정보자원 중 약 63.2%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·운영 중

- 전체 서버 18,856대 중 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되는 6,947대*를 제외한 11,909대 서버가 자체 관리·운영

* 통합전산센터는 기타공공기관 서버 114대를 포함해 총 7,061대를 통합운영

※ 통합센터 운영비율: 중앙행정기관(63.9%), 소속기관(27.6%), 준정부기관(0.4%)

구분		전체 서버수	자체 관리 서버수(비율)
계		18,856	11,909 (63.2%)
중앙 행정기관	본부	8,786	3,176 (36.1%)
	소속기관	4,777	3,460 (72.4%)
준정부기관		5,293	5,273 (99.6%)

○ 다수 기관이 소규모 전산실 운영으로 운영효율성 낮음

- 소규모 운영 시 도입비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나, 대부분(76.5%)의 개별기관이 50대 미만 장비보유·운영

<서버 당 유지보수비(도입비)>

(단위, 백만원)

제조사	모델명	CoreSpec.	개별운영		통합센터
			대규모 전산실	소규모 전산실	
IBM	x3650	1cpu	1.1(14.0)	1.5(14.8)	0.5(13.0)
HP	DL380 G5	1cpu	1.0(13.7)	1.3(13.7)	0.8(13.6)
HP	DL380 G5	2cpu	1.0(22.4)	1.5(26.4)	0.8(22.1)

※ 관리장비 중 서버기준 50대 이상(대규모전산실), 50대 이하(소규모전산실)

1) 국가정보화 투자관리체계 개선 용역 결과 참조('11.10, 행정안전부/한국정보화진흥원)

- 자체운영은 통합운영에 비해 정보침해 위협 및 재해·재난에 취약
 - 소규모 전산실의 경우 지속적인 보안장비 보강 및 24시간 관제인력 유지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
 - ※ DDoS공격, 개인정보침해사고 증가 등 정보보안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
 - 이중화 및 백업장비, 기반시설의 미흡으로 비상상황 대응 어려움
 - ※ 재해관련 인프라 보유율: 백업장비(61%), 발전기(23%), UPS(70%), 항온항습기(62%), 재해복구시스템(15%)
- 정보자원을 운영하는 인력규모, 표준 운영절차 준수에 따른 프로세스 수행역량 분석결과 생산성 저조 및 운영역량 부족
 - 개별기관의 정보자원 자체운영시 투입인력 대비 생산성 저조
 - ※ 1인당 관리하는 서버대수 : 개별 2.6, 통합 11.9
 - 표준운영절차 미보유 기관 및 운영정기보고서 미작성 기관이 다수
 - ※ 표준운영절차 미보유 기관 40%, 운영정기보고서 미작성 기관 33%
- 특히, 정부자산*으로 분류되는 정보자원은 보안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통합운영 필요
 - * 중앙행정기관 운영 자원, 정부예산으로 구매한 자원, 준정부기관 수탁운영 자원 등

지방이전기관 정보자원 통합 필요

- 국무총리실,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65개의 소속·준정부기관이 세종시·혁신도시로 이전('12~'16년)
 - 세종시 이전 37개 기관(본부 17, 소속 20)은 통합대상 서버 400여대를 자체운영중
 - ※ 1단계('12년): 142대(실사완료), 2단계('13년): 201대(추정), 3단계('14년): 51대(추정)
 - 혁신도시 이전 145개 기관 서버 7,894대 중 자체운영 서버는 7,877대
 - ※ 이전기관 중 109개 기관(75%)이 100대 미만의 소규모 전산실 운영 중
- 정보자원을 기관별 자체운영하기보다는 통합시 안정적·효율적 운영 가능
 - 통합대상 정보자원을 기관별 지방이전 시점에 맞춰 통합 추진시 정보자원 이전비용 및 개별기관 전산실 구축비 절감 효과

➡ 지방이전기관 이전시점에 맞춘 정부자산 정보자원 추가 통합운영 필요

□ 정보자원 통합관리 기반시설 부족

- '11년말 현재 제1·2통합전산센터 전산실 여유면적이 약 27%로 대규모 정보자원의 추가 수용은 어려움
- 일부 지방이전기관 정보자원 수용시 면적 한계치에 도달하여 정보자원 통합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운영기반 추가 마련 필요
- ※ 입주·운영 중인 정보자원의 증가(연평균 7% 추산)까지 감안하면, 기존 통합 전산센터의 증축으로는 여유면적 부족 문제 해결 어려움

<대전·광주센터 전산실 사용면적 현황>

(단위: ㎡, '12년 5월 기준)

구분	계	대전	광주
전산실 면적	15,753	8,812	6,941
임계용량	11,140	6,049	5,091
사용면적	8,123	4,153	3,970
	(73%)	(69%)	(78%)

□ 소속·준정부기관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제도적 근거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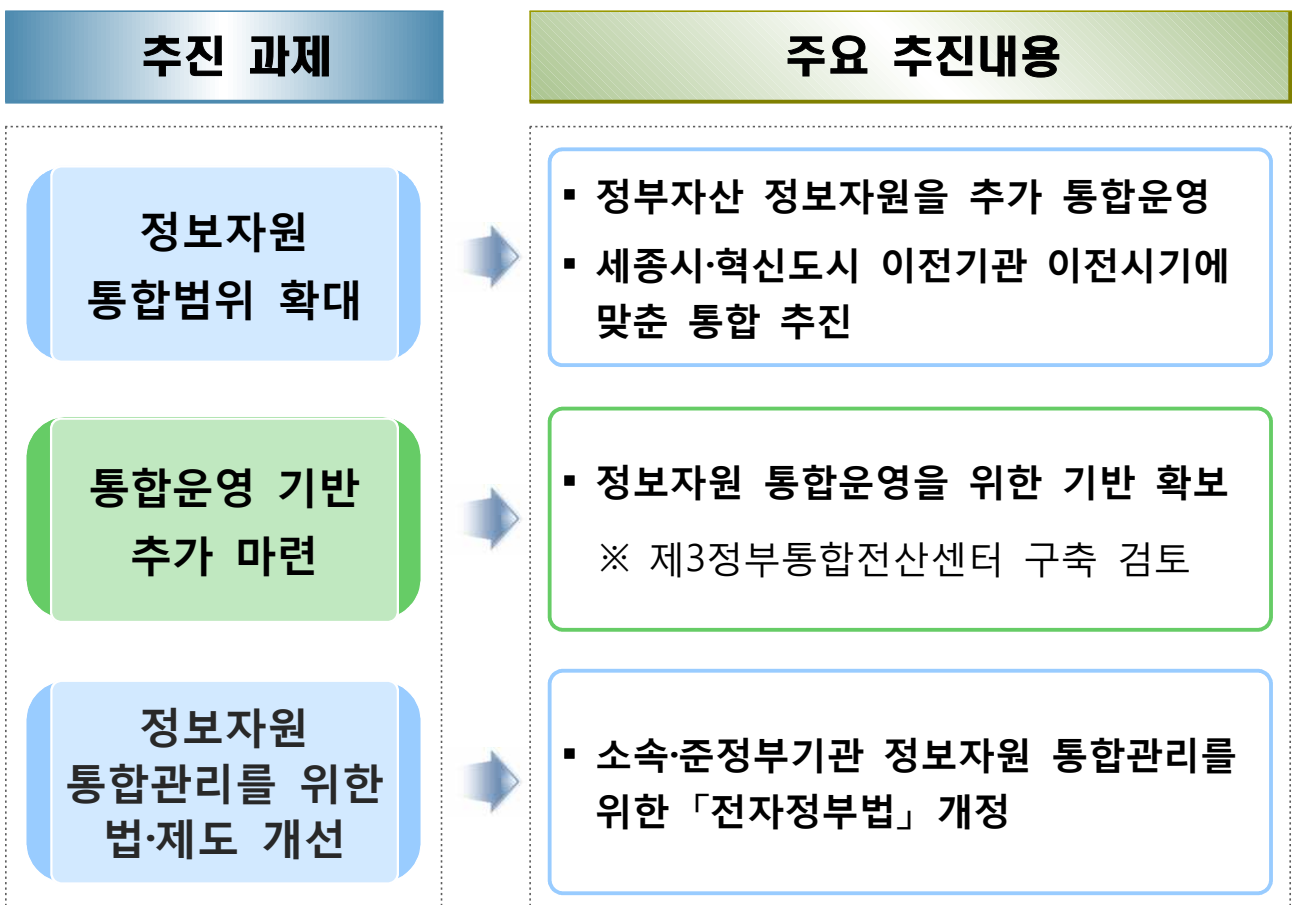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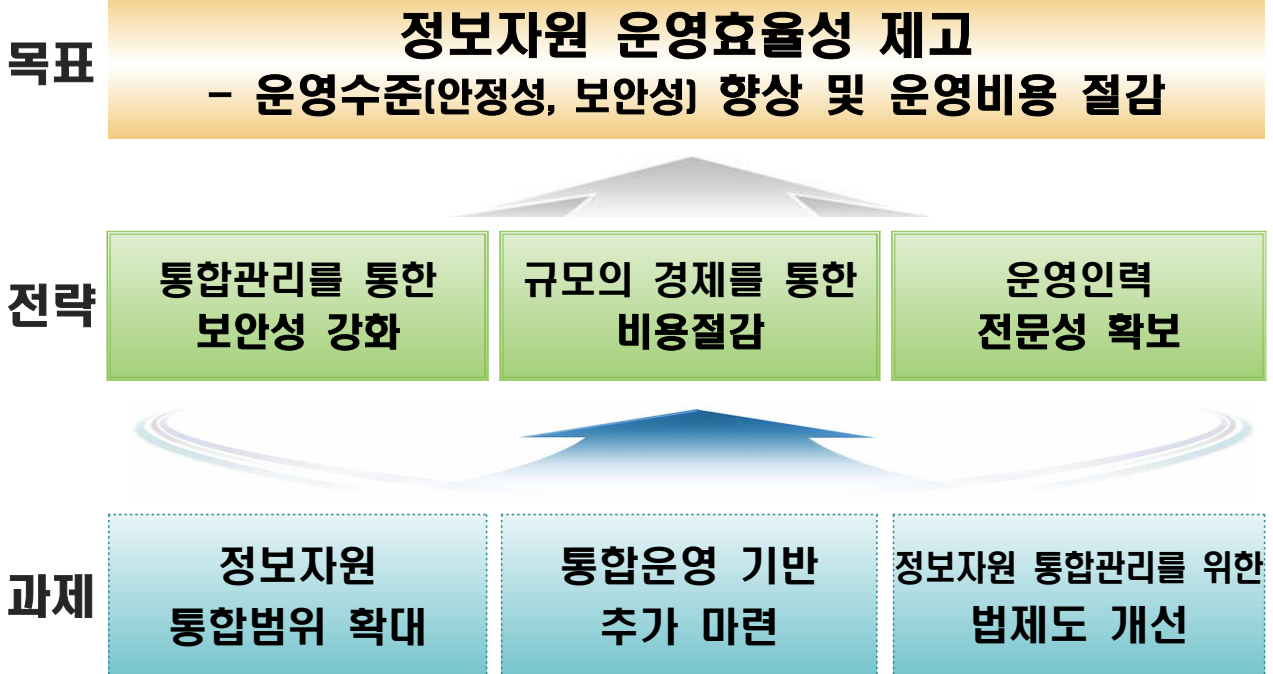
- 현재 일부 소속(1,317대) 및 준정부기관(20대) 정보자원이 통합센터 통합 관리·운영중이나,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
- 현 「전자정부법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·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
- 향후 통합운영될 소속·준정부기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근거 마련 필요
- ※ 소속·준정부기관 의견조사('12.5월)결과, 여러 기관이 자체운영 정보자원의 통합센터 입주 희망

➡ 정보자원 통합운영 기반마련을 위한 통합운영기반 추가마련 및 통합운영의 제도적 근거 보완 필요

IV

추진계획

1 추진목표 및 전략



2 추진과제

2-1 정보자원 통합운영 범위 확대

- (대상) 정부자산으로 분류되는 정보자원을 추가 통합운영
 -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자체운영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추진
 - 준정부기관 위탁운영 중앙행정기관 정보자원도 통합센터로 이전
 - ※ 통신망관리 등 개별기관 운영이 필수적인 자원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하고, 준정부기관 내부업무용 정보자원은 기관 희망시 통합 검토
- (방식) 기관별 이전시기에 따라 정보자원 추가 통합운영 추진
 - ※ 정보자원 통합방안 관련 중앙행정기관 정보화담당관 협의회(5.3) 및 소속·준정부기관 설명회(5.25) 기 개최
 - '12~'15년 세종시·혁신도시 이전기관 정보자원은 대전·광주통합 전산센터 이전
 - ※ 세종시 이전기관은 대전·광주센터 분산이전,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광주센터 이전 (광주센터 소규모 증축 추진)
 - '16년 이후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미이전기관 정보자원은 통합 운영 기반 추가마련 후 이전

<연도별 추가 통합대상 정보자원>

통합 년도	정보자원 수 (서버 기준)		비고
계	8,128		
'12년	142	(세종시 이전기관 142)	기존 통합전산센터에 수용
'13년	500	(세종시 201, 혁신도시 299)	
'14년	324	(세종시 51, 혁신도시 273)	
'15년	508	(혁신도시 이전기관 508)	
'16년 이후	6,654	(미이전 및 '16년 이후 이전기관)	통합운영기반 추가마련 후 수용

※ 정보자원수는 범정부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('11.12월) 및 기관별 의견수렴결과('12.5월) 기준

※ '13년 이후 통합대상 정보자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상세실사 및 협의를 통해 확정 ('12년 이전기관은 실사·의견협의 완료)

2-2 통합운영 기반 추가 마련

- (필요성) 기존 통합전산센터의 여유면적이 부족하여 통합대상 정보자원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움
- (추진방안) 정부자산 정보자원의 통합운영을 위한 제3정부통합 전산센터 구축 검토
 - 관련기관 합의 도출,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 추진

2-3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법·제도 개선

-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인 중앙부처 정보자원 및 소속기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-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통합관리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등 (소속기관, 준정부기관 등 포함)으로 확대·변경

〈전자정부법 제54조(정보자원 통합관리)〉

- (기존) ②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,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·관리할 수 있다
- (개정안) ②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,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·관리할 수 있다

□ 총 8,000여대 정보자원을 추가 통합운영

- 고성능 보안인프라 운용 및 24시간 관제로 DDoS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방어능력 향상
 - 수준 높은 보안 전담 인력에 의한 보안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용이
 - 대용량·고성능 보안장비 운용으로 방어능력 향상
 - 입주기관 통합 보안관리로 시너지 효과
 - ※ 한 개 기관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하더라도 통합전산센터에서 탐지하여 차단하면 전체 입주기관의 침해 방지
 - 보안성 강화로 정보유출 등의 피해 사전 예방
 - ※ 최근(124월) 법원은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위자료 1인 100만원 보상 판결
-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체계 적용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재해대비체계 및 안정적 운영환경 구축 가능
 - 통합전산센터는 업무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중이며,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으로 재난·재해 대비 및 복구 강화
-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으로 범정부 정보자원 운영 효율화
 - 자체적 정보자원통합 및 신기술적용이 용이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가능

○ 중앙행정기관 정보자원의 통합운영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
정보자원 유지보수 및 운영예산 절감

- 운영 5년째인 '11년까지 총 1조2,39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
- 운영 6년째인 '12년 상반기 중 손익분기점 돌파 전망

<통합센터 경영수지 분석결과('11년)>

(단위 : 억원)

ROI 분석 영역			TCO 분석 영역		
	계	12,390		계	12,473
센터 건립 효과	① 보안강화	5,571	자본 비용	① 센터 건축비	496
	② 재해복구 강화	174		② 전산환경 구축비	780
	③ 장애감소	177		③ 정보자원 이전비	807
	④ 자원통합	1,247		④ 정보자원 도입비	3,752
	⑤ 부처통합*	746	운영 비용	⑤ 운영 및 유지보수비	4,608
통합 운영 효과	⑥ 유지보수 절감	1,069		⑥ 인건비	358
	⑦ 운영비 절감	3,406		⑦ 제 경비(공공요금 등)	1,672

* '08년 부처 통합시 별도 소요되어야 했던 전산환경 이전비 절감 효과